

외환銀 헐값 매각 '잇선' 조사

주목 받는 전직 경제부총리 3인

'이헌재 사단' 의혹 중심으로

김진표 매각 영향력 미칠 재경장관  
진 념 론스타 회계법인 고문 활동

외환은행 '헐값 매각' 감사가 '잇선'의 개입 여부로 집중되는 가운데 진념·김진표·이헌재 등 전직 경제부총리 3명의 당시 역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헌재 전 부총리(2004.2~2005.3)는 외환은행이 매각될 당시 론스타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 김&장의 고문으로 있었다. 또 당시 화제가 됐던 세칭 '이헌재 펀드'까지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이 전 부총리로 향하는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이헌재 펀드의 실체는=이 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야인시절에 구상한 이헌재 펀드는 해외투자 자본의 '대항마'를 자처하며 우리금융지주 인수를 목적으로 지난 2003년 추진됐다. 실무작업은 이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이 맡았으며 연 기금, 기업 등을 대상으로 3조원 정도를 모으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12월 금융감독원에 '한나무 사모 M&A 펀드'라는 명칭으로 등록됐다. 이 펀드는 그러나 등록 3개월 후에 이 전 부총리가 전격 입각하면서 곧바로 해체돼 투자실적은 물론 자금조성도 없었다. 결국 '실체 없는 펀드'로 전락한 것이다.

◇펀드 참가자는 지금=이 전 부총리는 '김연장' 고문직을 지난 2월께 그만뒀다. 김영재 전 금융위 대변인은 지난 2004년 10월 칸사자산운용을 출범시켜 '제2의 이헌재 펀드'로 주목을 받았으나 펀드업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당시 이헌재 펀드의 실무 책임자였던 이윤재 전 비서관도 이후 기업컨설팅 업체인 코레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나, 사모펀드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헌재 사단의 정부 측 인사로 거론됐던 변양호 전 재경부 금정국장이 '보고펀드'를 출범시켜 명맥을 잇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 관련설은='이헌재 펀드'와 '이헌재 사단'이 다시 주목받는 것은 불법로비 혐의로 구속된 김재욱씨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소문 때문이다. 아울러 김씨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작업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이헌재 펀드 및 사단이 론스타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루머가 떠돌고 있다. 특히 변양호 공동대표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경부 금정국장으로 막강한 파워를 과시했다는 점도 최근 나오는 각종 '설(說)'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금융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소문에 대해 호사가들이 만들어낸 '소설' 수준의 의혹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이헌재 펀드가 초기에 해체된 실체없는 펀드인데다 취지가 국내 금융사가 외국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자는 애국심의 발로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너머지 두 부총리는=김진표 부총리(2003.2~2004.2)는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외환은행의 매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매각과정에서 깊숙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김 부총리는 외환은행이 매각되기 직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외환은행 정부 지분을 론스타에게 매각할 의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외환은행은 이후 3일 만에



이헌재 전부총리 김진표 전부총리 진 념 전부총리



외환은행 매각자문을 맡은 엘리엇트홀딩스표 박순풍(왼쪽)씨와 당시 외환은행 경영 전략부장 전용준(오른쪽)씨가 각각 업무상 형형 및 특경기법상 증재 혐의와 특경기법상 수재혐의로 11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구속수감되고 있다.

외자유치 협상자로 론스타를 선정했다. 진 념 전 경제부총리(2000.8~2002.4)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의 회계법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삼정 회계법인은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자산운용사인 허드슨어드바이저 코리아의 외부 감사를 맡고 있었으며, 허

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는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때 실사를 맡았었다. 이에 따라 이들 3명의 전 경제부총리가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얼마만큼 관여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감사원의 소환조사 등을 받게 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명숙 청문회' 문은 열었지만...

여야 시한 3일 앞두고 가까스로 타협... 난타전 예고

여·야의 정치적 이해대립 속에서 표류해온 한명숙 총리지명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협상이 가까스로 매듭을 풀었다.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을 사흘 앞두고 11일 협상 테이블에 앉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사령탑이 막판 줄다리기에 끝에 적절히 '주고 받는' 형식으로 타

협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 무엇보다도 한 지명자의 사전 당적정리 전제조건으로 물고 늘어진 한나라당이 "당적정리를 촉구하는 선"으로 후퇴한 것이 합의의 물꼬를 텄다.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당이 수용하기 힘든 당적정리를 이유로 청문회 자체

를 '보이콧'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라는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표'가 이탈하는 등의 역풍을 우려한 속내도 읽혀지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추정이다. 여야가 막판에 극적 합의점을 도출하

기는 했지만 이번 청문회 개최는 인사청문회법을 어긴 '편법' 청문회라는 비판론도 제기된다. 인사청문회법은 총리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뒤 15일 이내(한 지명자의 경우 4월14일 이전)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법의 주체인 국회가 여야간의 정치적 이해대립 속에서 스스로 법을 어긴 꼴이 됐다는 것이다. 돌파구가 열렸지만 향후 청문회의 기상은 '황사 낚시'(우리당 당직자)처럼 뿌얌다. 그만큼 5·31 지방선거전의 한복판에서 열리는 이번 청문회를 놓고 양당의 속내가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장흥군수 부인 '1억원 현금'

선관위 "명백한 기부행위"

"교회 십일조 현금은 선거법에 어긋나나?"

경찰과 선관위가 김인규 장흥군수 부인의 교회 '1억원 현금'과 관련해 법적용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헌행 공직선거법(제112조)은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과 선관위는 따라서 '1억원 현금'이 '통상적인' 헌금 행위였는지를 밝혀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우선 해당 장흥 선관위는 '명백한 기부행위'이며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다.

교회에 과태료 5천만원 부과 방침

경찰 "위법성 드러내면 관련자 입건"

장흥군 선관위 관계자는 "김 군수의 부인이 평소 해당 교회에 십일조 금액으로 1억원씩을 냈다면 통상적인 예에 따라 헌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번 경우는 평상시 현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예가 아닌 기부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상 후보와 후보 배우자의 목적이 없는 기부행위도 기부행위로 본다"면서 "군수 부인의 '1억원 현금'은 명확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거용 기부행위라는 의혹이 짙지만 '고유의 종교활동'이라는 반발을 잠재울 만한 물증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또 '수익금의 10분의 1 기부'라는 의미로 따져

볼 때 '김씨가 현금을 낼 당시 1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도 의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인 김씨는 1년에 한번씩 100만원 안팎의 현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김씨를 출석시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돈의 출처나 수익금 발생경위 등을 꼼꼼히 따진 뒤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입건키로 했다. 선관위도 교회 측에 과태료 상한선인 5천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종교행위'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1억원 현금'에 대한 결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인규 장흥군수는 부인의 '교회 현금 1억원' 파문과 관련, 11일 군민들에게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김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제 처의 거액 현금사건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용서를 빌었다.

그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처에게 확인한 결과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하나님과의 약속이어서' 의미로 1억원의 현금을 수표로 교회에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처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한 행동이 었더라도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한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그러나 "거액 현금의 법적 문제는 관계기관에서 엄정히 가려질 것이며 정치적,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군민의 심판을 직접 받겠다"고 말해 이번 파문과 관련해 출마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정홍=김용기기자 kykim@

여당내 한-미 FTA 반대기류 확산

진보진영 중심 신중론 부상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에 이어 국민의 정부 농림부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상지대 총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고강도 비판한 데 이어, 여당 내에서도 한미 FTA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미 FTA에 대한 표면적인 당내 기류는 한미 FTA는 국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며 정부-여당의 공조 하에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자는 것이었다.

FTA 관련 여야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FTA포럼'도 우리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정회원 15명 중 우리당 의원은 11명으로 유재건 임종석 김혁규 정장선 이종걸 김명자 정의용 박영선 이광재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당내에서 불거지는 한미 FTA 신중론 내지 비판론의 중심에는 재야파의 좌장인 김근태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차질 이념적 스펙트럼의 차이에 따라 중대한 대외정책을 놓고 균열조짐을 보이는 것이 범여권에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이달초 모임을 갖고 성급한 FTA 추진은 위험하며 신중한 협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은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 농업의 경쟁력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국토는 난개발로 엉망이 될 것"이라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Eten Hospital (에덴병원) featuring a large tree and text promoting services like '시니어 종합진료 센터' and '장시 50주년을 전심으로 축하드립니다'.